

특성화고 졸업해도... 취업 “어렵네”

광주 35%·전남 37% 그쳐... 대책 마련 시급

자동화설비고·항만물류고 높은 취업률과 대조

광주·전남지역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의 취업률이 전국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경제구조가 취약한 탓에 취업률을 올리기 쉽지 않지만, 시설 현대화와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졸업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취업률은 현황을 분석한 결과, 4월1일 현재 광주지역 학생들의 취업률은 35.2%, 전남은 37.6%였다.

취업을 목표로 하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의 졸업생 중 3분의 1가량만 취업에 성공한 셈이다. 취업을 하지 않은 학생 중 절반가량은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전남지역의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취업률은 꾸준히 오르고 있

다.

광주는 지난 2008년 23.7%에서 2010년 27.3%, 지난해 30.6%로 상승했다. 전남도 2008년 22.4%에서 2010년 25.8%, 지난해 38.8%로 올랐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비교하면 광주의 취업률은 12위, 전남은 10위로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이는 광주·전남지역의 경제구조가 취약해 기업활동이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광주의 경우 양질의 일자리인 대기업과 공공기관 취업률이 타 지역보다 월등히 높아 고무적이다.

취업자 중 대기업 취업 비율은 38.6%, 공공기관은 11.3%로 전국 1위

다. 특히, 대기업은 앰코테크놀로지 코리아와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에 대부분 취업했다. 중소기업 취업률은 40.5%였다. 취업자 중 51%는 타 지역으로 취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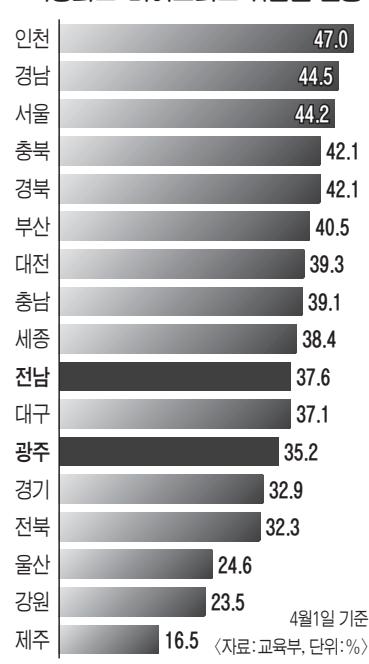
그만큼 광주의 경제구조가 척박하다보니 공공기관으로 쓸리고, 타 지역 취업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기업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는 광주 지역 마이스터고인 자동화설비고의 취업률은 97.2%, 전남지역 마이스터고인 항만물류고의 취업률은 71%로 다른 특성화고와 대조를 보였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광주 경제구조가 취약한 탓에 일자리가 많지 않아 취업을 올리기 위해 한계가 있다”면서 “직업교육의 특성상 도제식 교육이 중심을 이루는 만큼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시설 현대화를 통한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취업률 조사는 건강보험·고용보험·취업증명서류 등 취업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

■ 2013년 시도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취업률 현황



료를 통해 확인된 경우에만 인정했다. /부경일기자 jwpark@kwangju.co.kr



제자 업어주는 선생님들

업어주고 있다.

선동일·최희섭 등을 배출한 야구 명문인 광주 송정동초등학교(교장 윤용구)는 15일 승승의 날을 맞아 자체 간 야구대회를 열었다. 야구부 학생과 선생님 팀으로 나눠 경기를 한 뒤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격려하며 /니영주기자 mjna@kwangju.co.kr

檢, ‘4대강 비리’ 건설업체 손 본다

담합 혐의 25개 업체 압수수색 비자금 의혹 등 수사 확대 촉각

검찰이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책사업이었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공사비리와 관련, 건설업체들에 대한 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한섭부장검사)는 15일 오전 검사 10여명과 수사관 등 200여명을 동원해 대형 건설업체 16곳과 설계업체 9곳 등 25개 업체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대상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담합 과정금이 부과된 현대건설·삼성물산·대우건설·GS건설·포스코건설·대림산업·SK건설·현대산업개발 등 8곳과 시정명령을 받은 금호산업·쌍용·한화·계룡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 경남기업, 삼한기업 등 8곳이다.

4대강 1차 터기 공사에 참여한 건설사가 대부분이고 2차 공사에 참여한 업체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들 업체의 서울 본사 및 경기, 인천, 대전, 경북 포항, 나주 등지의 지사 등 30여곳에 수사장을 보냈다. 압수수색에는 대검 디지털포렌식 요원들도 동원됐다.

검찰은 2차 터기에 참여한 건설사의 경우 현재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기존 고발업체들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어 함께 압수수색했다고 설명했다.

4대강 사업에는 지난 정부 5년 동안 약 22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으며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일부 부실공사가 지적됐고 참여업체들이 대강 사업에서 입찰 담합을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1115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호산업과 쌍용·한화·계룡건설, 한진중공업 등 8곳에는 시정명령만 내렸다.

검찰이 향후 이들 건설사의 비자금이나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임직원의 횡령·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4대강 사업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으로 현대건설 전·현직 임원 12명이 고발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가 수사하고 있으며 대구지검도 4대강 사업 비리를 수사한 바 있다.

4대강 사업에는 지난 정부 5년 동안 약 22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으며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일부 부실공사가 지적됐고 참여업체들이 대강 사업에서 입찰 담합을 했다며

검찰이 향후 이들 건설사의 비자금이나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임직원의 횡령·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4대강 사업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으로 현대건설 전·현직 임원 12명이 고발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가 수사하고 있으며 대구지검도 4대강 사업 비리를 수사한 바 있다.

검찰은 이들 업체의 서울 본사 및 경기, 인천, 대전, 경북 포항, 나주 등지의 지사 등 30여곳에 수사장을 보냈다. 압수수색에는 대검 디지털포렌식 요원들도 동원됐다.

검찰은 2차 터기에 참여한 건설사의 경우 현재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기존 고발업체들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어 함께 압수수색했다고 설명했다.

4대강 사업에는 지난 정부 5년 동안 약 22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으며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일부 부실공사가 지적됐고 참여업체들이 대강 사업에서 입찰 담합을 했다며

검찰은 이들 업체의 서울 본사 및 경기, 인천, 대전, 경북 포항, 나주 등지의 지사 등 30여곳에 수사장을 보냈다. 압수수색에는 대검 디지털포렌식 요원들도 동원됐다.

검찰은 2차 터기에 참여한 건설사의 경우 현재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기존 고발업체들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어 함께 압수수색했다고 설명했다.

4대강 사업에는 지난 정부 5년 동안 약 22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으며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일부 부실공사가 지적됐고 참여업체들이 대강 사업에서 입찰 담합을 했다며

검찰은 이들 업체의 서울 본사 및 경기, 인천, 대전, 경북 포항, 나주 등지의 지사 등 30여곳에 수사장을 보냈다. 압수수색에는 대검 디지털포렌식 요원들도 동원됐다.

검찰은 2차 터기에 참여한 건설사의 경우 현재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기존 고발업체들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어 함께 압수수색했다고 설명했다.

4대강 사업에는 지난 정부 5년 동안 약 22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으며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일부 부실공사가 지적됐고 참여업체들이 대강 사업에서 입찰 담합을 했다며

검찰은 이들 업체의 서울 본사 및 경기, 인천, 대전, 경북 포항, 나주 등지의 지사 등 30여곳에 수사장을 보냈다. 압수수색에는 대검 디지털포렌식 요원들도 동원됐다.

검찰은 2차 터기에 참여한 건설사의 경우 현재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기존 고발업체들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어 함께 압수수색했다고 설명했다.

4대강 사업에는 지난 정부 5년 동안 약 22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으며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일부 부실공사가 지적됐고 참여업체들이 대강 사업에서 입찰 담합을 했다며

검찰은 이들 업체의 서울 본사 및 경기, 인천, 대전, 경북 포항, 나주 등지의 지사 등 30여곳에 수사장을 보냈다. 압수수색에는 대검 디지털포렌식 요원들도 동원됐다.

검찰은 2차 터기에 참여한 건설사의 경우 현재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기존 고발업체들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어 함께 압수수색했다고 설명했다.

4대강 사업에는 지난 정부 5년 동안 약 22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으며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일부 부실공사가 지적됐고 참여업체들이 대강 사업에서 입찰 담합을 했다며

검찰은 이들 업체의 서울 본사 및 경기, 인천, 대전, 경북 포항, 나주 등지의 지사 등 30여곳에 수사장을 보냈다. 압수수색에는 대검 디지털포렌식 요원들도 동원됐다.

검찰은 2차 터기에 참여한 건설사의 경우 현재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기존 고발업체들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어 함께 압수수색했다고 설명했다.

4대강 사업에는 지난 정부 5년 동안 약 22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으며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일부 부실공사가 지적됐고 참여업체들이 대강 사업에서 입찰 담합을 했다며

검찰은 이들 업체의 서울 본사 및 경기, 인천, 대전, 경북 포항, 나주 등지의 지사 등 30여곳에 수사장을 보냈다. 압수수색에는 대검 디지털포렌식 요원들도 동원됐다.

검찰은 2차 터기에 참여한 건설사의 경우 현재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기존 고발업체들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어 함께 압수수색했다고 설명했다.

4대강 사업에는 지난 정부 5년 동안 약 22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으며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일부 부실공사가 지적됐고 참여업체들이 대강 사업에서 입찰 담합을 했다며

검찰은 이들 업체의 서울 본사 및 경기, 인천, 대전, 경북 포항, 나주 등지의 지사 등 30여곳에 수사장을 보냈다. 압수수색에는 대검 디지털포렌식 요원들도 동원됐다.

검찰은 2차 터기에 참여한 건설사의 경우 현재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기존 고발업체들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어 함께 압수수색했다고 설명했다.

4대강 사업에는 지난 정부 5년 동안 약 22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으며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일부 부실공사가 지적됐고 참여업체들이 대강 사업에서 입찰 담합을 했다며

검찰은 이들 업체의 서울 본사 및 경기, 인천, 대전, 경북 포항, 나주 등지의 지사 등 30여곳에 수사장을 보냈다. 압수수색에는 대검 디지털포렌식 요원들도 동원됐다.

검찰은 2차 터기에 참여한 건설사의 경우 현재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기존 고발업체들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어 함께 압수수색했다고 설명했다.

4대강 사업에는 지난 정부 5년 동안 약 22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으며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일부 부실공사가 지적됐고 참여업체들이 대강 사업에서 입찰 담합을 했다며

검찰은 이들 업체의 서울 본사 및 경기, 인천, 대전, 경북 포항, 나주 등지의 지사 등 30여곳에 수사장을 보냈다. 압수수색에는 대검 디지털포렌식 요원들도 동원됐다.

검찰은 2차 터기에 참여한 건설사의 경우 현재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기존 고발업체들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어 함께 압수수색했다고 설명했다.

4대강 사업에는 지난 정부 5년 동안 약 22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으며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일부 부실공사가 지적됐고 참여업체들이 대강 사업에서 입찰 담합을 했다며

검찰은 이들 업체의 서울 본사 및 경기, 인천, 대전, 경북 포항, 나주 등지의 지사 등 30여곳에 수사장을 보냈다. 압수수색에는 대검 디지털포렌식 요원들도 동원됐다.

검찰은 2차 터기에 참여한 건설사의 경우 현재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기존 고발업체들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어 함께 압수수색했다고 설명했다.

4대강 사업에는 지난 정부 5년 동안 약 22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으며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일부 부실공사가 지적됐고 참여업체들이 대강 사업에서 입찰 담합을 했다며

검찰은 이들 업체의 서울 본사 및 경기, 인천, 대전, 경북 포항, 나주 등지의 지사 등 30여곳에 수사장을 보냈다. 압수수색에는 대검 디지털포렌식 요원들도 동원됐다.

검찰은 2차 터기에 참여한 건설사의 경우 현재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기존 고발업체들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어 함께 압수수색했다고 설명했다.

4대강 사업에는 지난 정부 5년 동안 약 22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으며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일부 부실공사가 지적됐고 참여업체들이 대강 사업에서 입찰 담합을 했다며

검찰은 이들 업체의 서울 본사 및 경기, 인천, 대전, 경북 포항, 나주 등지의 지사 등 30여곳에 수사장을 보냈다. 압수수색에는 대검 디지털포렌식 요원들도 동원됐다.

검찰은 2차 터기에 참여한 건설사의 경우 현재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기존 고발업체들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어 함께 압수수색했다고 설명했다.

4대강 사업에는 지난 정부 5년 동안 약 22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으며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일부 부실공사가 지적됐고 참여업체들이 대강 사업에서 입찰 담합을 했다며

검찰은 이들 업체의 서울 본사 및 경기, 인천, 대전, 경북 포항, 나주 등지의 지사 등 30여곳에 수사장을 보냈다. 압수수색에는 대검 디지털포렌식 요원들도 동원됐다.